

野 “황교안 탄핵·새 특검법 추진”

연장 거부 박영수 특검 종료
탄핵정국 큰 파문 정국 격랑
여야 정치권 극한 대결 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특검의 수사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물론 새로운 특검법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은 수사종료 시한인 28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랜 고심 끝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4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소집하고 기존 특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새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또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황 권한대행 탄핵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바른정당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앞 탄핵 대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찬성을 주장하는 단체(전면)와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단체(뒷쪽)가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적폐 청산의 염원을 외면한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다”고 규탄했으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탄핵은 법적 논란이 있는데다 새로운 특검법 제정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국회 선진화법’에 묶여 있어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아니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과 새로운 특검법 상정 등을 놓고 여야가 최악의 대치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내온 특검마저 28일 종료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3월 13일 이전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극한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파면으로 국민 승리”... “탄핵근거 입증 안 돼”

현재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국회 측-朴 대리인 ‘마라톤 공방’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 일인 27일 국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치열한 ‘마라톤 공방’을 벌였다.

〈관련기사 3면〉

현재는 27일을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했

으며 국회와 대통령 측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이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 먼저 국회 측이 1시간 14분동안 변론을 전개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은 각종 연설문과 정책, 인사 자료 등을 최순실씨에게 보낸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주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을 부당하게 면직시켜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을 통해 사기업에 대한 권한남용과 함께 언론자유를 침해했으며, 세월

호 참사와 관련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쟁점별로 국회 측과 팽팽히 대립했다.

최순실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으며 탄핵소추의 근거가 모두 입증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탄핵사유 일괄 표결은 위법으로 대통령 방어권과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라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고흥~거제 483km
해안관광도로 만든다

국토부,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남해안 한려수도와 다도해의 절경이 펼쳐지는 고흥~경남 거제 구간 해안도로가 명품 해안관광도로로 재단장한다.

〈관련기사 5면〉

세계적인 드라이브 코스인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를 벤치마킹해 8개 시·도에 걸쳐 있는 남해안의 풍광 좋은 해안도로들을 모아 하나의 관광 브랜드로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고흥, 여수, 순천, 광양과 경남 남해, 하동, 통영, 거제 등 8개 시·군을 묶어 남해안 광역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고흥부터 거제까지 483km에 이르는 해안도로의 주요 지점에 건축·조경·설치미술을 결합한 전망대와 포켓공원 등을 설치해 ‘쪽